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

박봉규 청주대학교

논문요약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북아 정세로 인해 주한미군이 성립하고 존속하였지만 이제는 역으로 주한미군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한미군이 철군 결정과 번복, 감축으로의 귀결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도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관통하여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냉전적 소산인 주한미군이 탈냉전의 파고 속에서도 존속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즉 동북아 정세에 적응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한미군이 중대한 시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정체성 변화와 제도화 가능성이 주한미군의 미래 존재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 핵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고 작용한다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어 : 주한미군, 동북아 정세, 구성주의, 정체성, 제도화

* 이 논문은 2019-2021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 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한미동맹의 담지자인 주한미군은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드러난 현상으로만 국한한다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의 상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잦은 철군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주한미군은 변수의 가능성을 다분히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안보의 오랜 쟁점인 주한미군 문제를 보다 철저히 성찰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존재했지만 그 과정은 변화무쌍했다. 철군, 번복, 부분적 철수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완전 철군을 주장하고 실행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은 70여년 간 지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의 정책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 변화를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다. 주로 현실주의(realism)적인 고정된 시각에서 조망한 까닭에 주한미군의 정체성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냉전체제의 산물로 상정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한미군이 냉전체제의 산물이지만 데탕트와 탈냉전의 파고를 넘어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시기에 나름대로 적응하여 자신만의 정체성(identity)을 정립시켰기 때문이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서 변화의 계기는 기존 구조나 구성원간에 공유된 의미로 새로운 상황 전개를 부적합하게 만드는 파열적인 사건의 발생이다. 이러한 파열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행위자의 인지적 환경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기존의 규칙과 규범이 더 이상 적합한 행위를 확인하는 인지적 지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인지적 불일치가 드러나는 ‘중대한 시기(critical juncture)’¹⁾가 전개된다

1) 중대한 시기라는 개념은 경로의존적 제도 분석(path-dependent institutions analysis)에서 중요한 행위자들의 결정이 제도적 발전 선택에 인과적으로 결

(Flockhart 2016, 90). 중대한 시기에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궤적에서 중대한 시기는 냉전체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냉전체제가 완화되었던 데탕트와 탈냉전 도래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해소될 미래의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중대한 시기를 경과하면서 관련정책이나 규모가 영향을 받았다. 데탕트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냉전 완화로 주한미군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탈냉전과 9·11테러는 주한미군의 성격에 동북아를 보다 고려하게 만들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가능성 역시 주한미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정체성이 동북아의 평화유지로 정립되어 왔으므로 변화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속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전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와해된 지도 1세대가 흘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한복판에 있으며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 정세도 이념적 측면이 악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냉전체제와 유사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지역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등이 빈발하고 있고, 홍콩이나 타이완 정세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일대일로 등 대외팽창적 정책도 주요한 성과를 거두면서 미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도했고, 쿼드(Quad) 등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적 대응을 끌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탈냉전 등 향후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에도 주한미군이 지금까지의 적응을 기반으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핵 개발로 핵 도미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보 상태에 있는 북한문제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리킨다. <https://www.oxfordhandbooks.com/view/10.1093/oxfordhb/9780199662814.001.0001/oxfordhb-9780199662814-e-5>(최종검색일: 2021. 6. 20).

II. 주한미군에 대한 기존 연구

주한미군은 미소 대립의 반영이자 결과물인 한국전쟁을 계기로 성립한 한미동맹의 산물이다. 한미동맹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 주한미군이며 주한미군 자체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구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존속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미동맹이 실질적 힘을 바탕으로 유사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박봉현 2004, 61), 존재 유무의 차이는 크다. 미군이 1949년 6월에 철군하지 않았다면 한국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박봉현 2004, 121). 한미동맹의 담지자이자 동맹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이다. 한미동맹의 변화와 그 속에서 주한미군의 변화를 조망하는 것은 동어반복적이고 한미동맹의 변화 또한 일방적 성격이 농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고 역할이 재조정되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미국의 정책이나 전략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시기마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존재나 역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철군과 감축, 철수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부수립 이후 초기부터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완전 철군을 내세운 카터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동덕모 1978; 박준규 1978).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이상현·조윤형 2004; 정성철 2005; 박원곤 2007; 조관행 2015).²⁾

2) 1960년대 전반이나 포드 행정부 시기에 대한 연구도 일부 있다(조진구 2004; 마상윤 2007; 조원선 2020).

주한미군에 대한 연구는 탈냉전 이후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재편, 재조정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전략 변화에 따른 기능과 역할 재조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탈냉전 직후인 1990년대 주한미군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대세계 정책 변화와 주로 관련된다. 진영 차원의 대결이 와해됨으로써 미국의 안보 부담이 감소하고 미국의 경제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외주둔 미군이 감축되었다. 미군의 감축은 동맹국들에게는 상대적인 안보 부담 증가로 이어졌고 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장희 1998; 안영락·전성현 1999).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데 회담을 전후하여 고조된 통일과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김성한 1999; 백봉종 1999; 리영희 2000; 김창수 2001; 정세진 2001; 김홍길 2002; 홍현익 2003).

9·11테러는 주한미군에 대한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9·11 테러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이었다(김열수 2003; 김일영 2004; 김태효 2004; 이철기 2004; 윤영미 2007). 더불어, 이에 대한 찬반 혹은 비판과 반박의 논리가 주변국가의 인식이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정옥식 2003; 이수형·남창희 2004; 김재관 2004; 이정운 2004). 주한미군의 재배치, 재편, 재조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한미군 같은 불박이 진지고수형 주둔군을 다목적용 신속 배치군으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다(조상훈 2009, 125). 미국의 세계정책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그에 따른 안보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이성만 2005; 박창권 2006; 이상현 2006).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관련된 근본적인 쟁점들을 다루면서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입장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평화체제와 관련된 논의들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조성렬 2000; 김창수 2001), 평화협정 체결의 최대 쟁점의 하나로 주한미군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유상 2008; 신옥희 2012).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을 거론하기 보다는 한미동맹을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유엔사 문제나 평화협정, 지휘관계 등과 관련된다. 평화체제와 주한미군에 대한 연구는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활성화되었다(정경영 2018; 오혜란 2019).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의 정책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 변화를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주로 설명 대상으로 한정하고 고정된 시각에서 조망한 까닭에 주한미군의 정체성 변화 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을 냉전체제의 산물로 전제하고 주한미군 자체의 변화 등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Ⅲ.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 구성주의

본고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의 미래를 동북아정세에의 기여 가능성을 통해 조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북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실이 수십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은 당시의 정세와 세력을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산물이었으므로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현실주의일 수 있다. 동맹은 자국의 힘만으로 안보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때 타국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강력한 적대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동맹 참가국의 군사력을 결합함으로써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추구하기 때문이다(Morgenthau 1948, 157-187). 세력균형이야말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대안이자 해결책이다. 한반도의 현실은 ‘냉전의 외딴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과 거리가 있다. 부분적으로 화해의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냉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심화되는 측면도 상당하다. 한미

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동맹 혹은 주한미군에 대한 설명력은 여전히 현실주의의 몫일 수 있다. 하지만 냉전적 구도의 해체 가능성 혹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은 현실주의의 시각으로 주한미군의 문제를 상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실주의는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계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Flockhart 2016, 80).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한다면 한반도에서의 냉전의 해체는 곧 주한미군의 종식을 의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정체성을 고정적으로 보는 현실주의로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냉전의 반영일 수 있지만 주한미군이 환경이나 주변 정세 변화에 나름 적응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정세가 중소 분쟁, 데탕트, 소련의 붕괴, 중국의 개방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적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접근법은 구성주의이다. 구성주의는 특정한 주의나 시각, 견해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관행의 변화나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체제의 변화-무정부 문화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Adler 2008, 195-196). 세계를 주어진 것으로 보기 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보다 잘 설명해 주므로 주한미군의 변화를 조망하는데 보다 적실성이 있을 수 있다(Onuf 1989).

유럽의 경우처럼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중요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구성주의의 적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한반도의 냉전적 구도의 해소는 기존 현실주의나 자유주의(liberalism)에 기반한 이론적 시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NATO가 변화하는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제대로 포착한 것이 구성주의였다. 현실주의 시각으로는 NATO도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WTO)처럼 존재의 이유를 상실

한 유효기간이 넘긴 존재일 뿐이었다. 유럽의 기존 갈등적 관계를 규범·규칙에 기반한 협조적 관계로 재구성하는 데에도 구성주의적 시각이 보다 유용하였다(Flockhart 2016, 80). 구성주의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문제화하고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문시하면서(Pouliot 2004, 323), 이전의 관행들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통해 변화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체성, 이해관계,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설명해 준다(Flockhart 2016, 82).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서 구성주의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메타 이론이다(Carlsnaes 2016, 121).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성립한 논의이므로 실제 세계의 현상에 대한 구성주의의 유용성과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NATO의 역할에 대한 대안적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주의는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처방의 지침으로 사용되었고 현실 정치 역시 구성주의적 시각에 의해 움직였다(Flockhart 2016, 79). 이론이 정책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상이한 이론은 상이한 정책을 의미하고 이론을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Walt 1998, 29).

구성주의의 중요한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작은 부분들로 분리하기 어렵지만 네 가지 핵심 명제들로 제시할 수 있다(Flockhart 2016, 83-90). 이 명제들을 활용하여 주한미군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먼저, 현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도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세계는 생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은 인간의 합의와 관행(practice)으로 보강되는 공유지식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공유지식 생산의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이 중요하다(Flockhart 2016, 84). 두 번째로 물질적 구조 외에 관념적 구조에 주목하여 규범과 규칙을 중시한다. 구성주의는 세계와 타자의 행위를 해석하는 물질적인 존재와 규칙, 상징, 언어에 대한 공유지식을 강조한다. 공유지식 외부의 행위나 물리력은 의미가 없으며 구조 역시 물질적 요인 이외에 관념적 요소들

로 구성된다(Flockhart 2016, 85).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는 행위자가 사회화되는 공식적 규칙과 규범(norms)으로 체계화된다(Wendt 1992, 399). 규칙과 규범이 행위자로 하여금 정체성과 함께 적합한 행동을 구체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규범은 행위자의 적합한 행위에 대한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이익의 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조적 기능을 갖게 된다(Flockhart 2016, 85). 세 번째로 행위자가 자신과 사회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 타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정체성이 중요하다. 정체성은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일련의 특별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국가라는 하나의 기존 정체성을 전제하는 합리주의적 시각들과 구별된다. 행위자의 정체성 형성에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며 행위자들은 행위를 선택할 때 정체성에 부합하는 규범을 따른다. 특별한 상황에 특정한 정체성과 관련되는 규칙을 준수하려고 한다(Flockhart 2016, 87). 행위의 선택에서 현실주의·자유주의의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 이외에 '적합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는 구조와 행위자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다.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는 반면에, 행위자도 관행을 통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화(structuration)라는 것으로 구조와 행위자가 상호 구성적이라는 것이다(Giddens 1984). 일상화된(routinized) 관행이 사회적 사실과 제도를 보강하는 동시에 구조와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이다(Adler 2008, 196). 관행이 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인지적 세계가 재생산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해 준다. 이렇게 될 경우 무정부에 대한 문화가 변화할 수 있다(Flockhart 2016, 88). 한편, 구성주의는 행위자가 일상적 관행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구조를 우선시하고 변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³⁾ 구성주의적 분석이 행위자적 요소가 약한 원천적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

3) 이러한 문제로 구성주의는 동시에 안정과 변화의 근원이 되는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의 문제에 직면한다(Checkel 1998, 346).

를 해결하기 위해 관행과 의도적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구조와 행위자 수준의 관행이 안정을 선호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변화가 도래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구조와 공유된 의미가 새로운 상황에 부적합한 경우에 발생한다. 구성주의자들은 인지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러한 시기를 ‘중대한 시기’(critical juncture)로 간주한다.⁴⁾ 중대한 시기에 새로운 구조와 정체성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관행과 정체성 형성, 공유지식의 재구성에 의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여 의도적인 정책 변화가 가능해지면서 무정부의 문화와 논리가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Flockhart 2016, 90).

구성주의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사회적 사실이다. 사회적 사실은 관행을 통해 재강화되는 인간의 합의와 공유된 인식을 통해서 존재하는데 사회적 관계, 규칙, 일상화된 관행을 통해 구체화되어 객관적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사실로서 구성되며 어떻게 동북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Pouliot 2004, 320). 또한, 구성주의는 단순히 드러난 물리적 사실만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사회적 맥락, 공유된 인식, 관행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맥락적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한미동맹에 의한 주한미군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주한미군의 지금까지의 궤적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구성주의에서 구조는 공식적인 규칙과 비공식적이지만 관례화된 규범으로 구체화된다. 주한미군의 경우도 공식적인 규칙과 비공식적인 규범에 의해 영향을 맞는다고 가정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주한미군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며, 가능한 행위의 옵션에도 관련될 것이다.⁵⁾ 주한미군의 정체성이 변화한다면 그에 적합한 규

4) 행위자의 인지적 환경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기존의 규칙과 규범이 더 이상 적합한 행동을 확인하는 인지적 지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Flockhart 2016, 90).

5) 엄밀하게 본다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이라는 행위자의 반영일 수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무관하게 주한미군이 작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한미군을 행위자로 간주해도 분석의 결과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범에 의해 역할과 기능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주의에서는 구조와 행위자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일상화된 관행이 중요하다. 사회적 사실이 표출되고 습관화되어 처음 사회적 사실을 구성한 행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되는 것은 관행을 통해서이다. 관행이 일상화되면 안정화되어 구조와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Hopf 1998, 180). 문화도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한다. 주한미군 역시 이러한 틀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의 변화 그리고 그에 의한 정체성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에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중대한 시기’가 전개될 수 있다. 한반도의 탈냉전 같은 상황은 주한미군에게도 인지적 불일치로 다가올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관행과 정체성 형성, 공유지식의 재구성에 의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여 의도적인 정책 변화가 가능해지면서 변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구성주의적 시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추론하여 동북아에서의 미래의 가능한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다. 주한미군의 변화한 그러나 이미 관행화된 역할과 기능을 동북아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고 그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주한미군의 태동과 전개라는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모색하려는 것이다.

IV. 사회적 사실로서의 주한미군: 미·소 대립과 냉전체제의 형성

사회적 사실로서의 주한미군을 상정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히 처음 존재하게 된 이유나 원인에 제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주한미군은 시기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를 의미한다. 하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직후이다.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의 항복 접수와 신탁통치란 단기적 목적을 갖고 한반도 남쪽에 주둔했던 것이다(박봉현 2004, 121). 소련이 한반도

를 석권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박하게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2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세계를 미국과 소련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성한 것이 얄타체제(Yalta system)이다.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가 상이한 것을 보면 얄타체제 역시 어떤 원칙이나 기준으로 성립한 것 같지는 않다. 38선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단함으로써 독일과는 달리 일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국제법이나 정의의 차원과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유럽에서의 전후 처리처럼 승전국에 의한 패전국 독일의 분할 점령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또다른 패전국 일본의 분할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아마도 태평양을 앞바다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분할이 소련에게 태평양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전쟁의 가해자는 온전하게 보존되고 피해자인 한반도가 분단하게 된 것은 이러한 까닭이었다. 신탁통치는 이러한 비정상적이지만 미국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된 기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명분일 수 있었다.

냉전체제(Cold War system)의 형성 역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소련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상황적 대응이 그렇게 만든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냉전을 상징하는 미국의 봉쇄정책 마저 치밀하게 제기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 케난(George F. Kennan)이 워싱턴으로 보낸 장문의 전보(Long Telegram)가 봉쇄정책의 기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⁶⁾ 하지만 봉쇄정책의 전개 과정은 케난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정책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의도와 다르게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냉전체제 형성이 의도된 것이라기보다 적응한 것이라면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은 점진적으로(incrementally)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것도 상황에 대한 적응

6) 케난의 봉쇄정책을 기반으로 트루먼(Truman) 독트린, 마셜(Marshall) 플랜 등이 시행된다. George F. Kennan, "The Long Telegram." <http://www.netanet.net/KENNAN.html>(최종검색일: 2021. 6. 10).

이었다. 한국전쟁이 중국 개입으로 장기화되면서 휴전은 양 진영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문제는 휴전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의 존재였다. 이승만은 휴전이 불가피하게 보이자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하였다. 2차 대전과 연이은 한국전쟁 수행으로 미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매우 높았다. 미국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군다나 동맹을 요구하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 실제로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계획(Plan EverReady)을 수차례 고려했다.⁷⁾

양측의 입장 차이는 반공포로 석방을 계기로 극적인 수렴점을 찾게 된다(남시욱 2020, 99-102). 휴전을 위해 이승만 정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결국 휴전을 성립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역시 다분히 상황적이고 점진적이었다.

한미동맹의 성립을 구성주의로 해석하면, 그 당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정세를 주도한 국제체제의 무정부 문화가 적대적이고 대결적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대립적인 성격의 한미동맹이 성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 차원의 공산 진영에 대한 봉쇄정책이 미국 정책의 기축이었던 것도 당시 국제체제의 성격에서 설명될 수 있다.

V.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 중대한 시기와 정체성의 변화

구성주의에서 변화의 계기는 새로운 상황 전개와 구성원들의 인지 불일치가 관련된다. 기존의 규칙과 규범이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도출하기에 부적절한 ‘중대한 시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는 동북아 냉전체제의 완화 내지 해체와 관련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관행이 이

7) ‘에버레디계획’으로 불리웠던 이승만 제거 계획은 1952년 7월 부산 정치파동 시기에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입안한 것이다. 이후 2차에 걸쳐 수정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남시욱 2020, 63-109).

루어지고 적합한 규범과 규칙이 채택되어 타당성과 정체성에 대한 준거로 작동할 때 행위자간의 공유지식이 재구성되어 기존 행위자나 제도는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퇴화하고 소멸할 수 있다. 냉전의 산물인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탈냉전 상황에서 해체된 것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중대한 시기는 기존의 냉전적 공유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데탕트와 탈냉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성립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1. 중대한 시기 I: 데탕트

먼저, 동북아 정세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중대한 시기는 냉전적 대립을 완화시킨 데탕트와 관련된다. 미국은 베트남전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과의 데탕트를 추구한다.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닉슨 행정부는 1969년 7월 5일 팜에서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 국민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는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하였다. 의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해 동맹국의 책임분담을 강조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베트남전 같은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강대국 핵 위협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하고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국가들을 측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조성훈 2008, 306). 미중의 데탕트는 동북아 정세 즉 동북아 냉전체제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다.⁸⁾ 이러한 변화는 기존 냉전체제의 규범과 규칙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행동을 판단할 수 없게 된 인지적 불일치를 야기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냉전적 인식이 불명확해지게 됨에 따라 새로운 타당성과 정체성의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립과 적대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동북아 국제체제의 적대적 무정부 문화가 어느 정도 타협과 협력의 문화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의도적 정책 변화

8)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70년대에 남북관계에도 어느 정도 해빙의 징후가 있었다.

를 가져와 주한미군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를 공식 통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이전의 한반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1968년에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기도사건, 미 해군 정보함 납치 사건, 북한 무장공비의 울진·삼척 침투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중첩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철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위반이며 미국의 배신이라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 일정은 확정되고 시행되었다.⁹⁾ 이러한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동북아 정세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닉슨 독트린은 전세계적 차원의 미국 대외정책과 관련된 것이었고 미중과의 데탕트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는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철군 사례이다. 한국의 인권 현실을 비판하며 비도덕적 정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여 완전 철수를 공약했던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개된 상황이다. 카터는 정부 출범과 더불어 주한 미 지상군 전면철수를 약속했다(박봉현 2004, 12). 당시 한국의 안보 상황은 좋지 않았다. 월남 패망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화 의지가 강화되었고, 비무장지대 남침용 땅굴, 서해 5도 도발 및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으로 긴장이 크게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터의 철군 정책은 현실주의적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다.¹⁰⁾ 카터의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동북아의 무정부 문화와 관련될 수 있다. 미중의 데탕트가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가져왔고 특히 전략무기제한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9) 1971년 3월 동두천 주둔 제7보병사단 2만 명과 3개 공군 비행대대가 철수하여 주한 미군은 41,000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황병무 2020, 266-267).

10) 카터의 결정은 미국 내외의 많은 반대에 부딪치는데 주한미군 내부에서의 반대가 특이한 점이였다. 싱글러브(John K. Singlue)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 제2사단 철수가 남한의 전력을 약화시켜 김일성의 남침을 유발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황병무 2020, 269). 최종적으로 주한미군은 3,400명 감축에 그쳤으며 대부분 지원 인력이었다(허욱 외 2019, 167).

Talks, SALT) 등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동북아 정세의 변화 특히 무정부 문화의 변화가 주한미군의 정책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데탕트와 소련과의 협력이 주한미군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적합한 행위의 타당성 근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2. 중대한 시기 II: 탈냉전과 9·11

탈냉전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변화일 수 있다. 한미동맹이 소련의 팽창을 방지하려는 냉전체제의 소산이므로 냉전체제 해소는 봉쇄정책과 한미동맹의 근거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반도 차원에서는 냉전체제가 온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동북아 정세는 변화하였다. 우리도 북방정책을 통하여 이전 적대적이었던 중국,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였고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던 것이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탈냉전 도래를 예상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 냉전체제 말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방어적 충분성’(defensive sufficiency)이라는 개념 하에 자발적으로 군비를 축소했을 때에 변화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¹¹⁾ 이러한 변화는 소련에 의한 전통적 안보위협감의 감소를 의미했다. 신냉전의 인지적 환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협력으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탈냉전으로 변화한 동북아 정세로 주한미군 규모는 축소된다. 1989년 민주당 레빈(Carl M. Levin) 의원이 단계적 철수를 통해 주한미군을 10,000명으로 감축하는 감군안을 제출했으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710), 뒤이어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관련된 ‘년-워너’ 안이 상원

11) 고르바초프가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 질서 건설을 요구한 ‘새로운 정치적 사고(new political thinking)’이라고 불리는 외교정책 원칙을 천명했을 때에도 미국의 대부분 분석가들은 이를 서구를 속여 위험한 양보를 얻으려는 시도로 평가절하했다(Wohlforth 2016, 45)

에 제출되었다. 1990년 4월 미국방부는 ‘년-워너 수정안’에 따라 대통령 보고서인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for the 21st Century*(일명, 동아시아 전략 구상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T)를 의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3단계로 아태 지역 미군을 철수·조정하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은 1단계 공군 2,000명, 지상군 5,000명 등 7,000명을 감축하고 2단계에서 6,500명 감축, 3단계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1단계 계획에 의해 1992년 말까지 공군 1,987명 지상군 5,000명 등 6,987명이 철수하였다(황병무 2020, 272). 1993년부터 시행될 2단계 6,500명 철수는 북한 핵 개발 의혹으로 다시 번복되어 유보된다.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신아태전략(East Asia Strategic Report, EASR)에 의해 철수 논의는 종결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713).

2001년 9·11 테러 또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기존과 다른 협력의 메커니즘을 산출했다. 미국은 ‘의지의 연합’(Coalition for the Willing)을 결성하며 이전의 동맹 관계와 무관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찬성 여부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한미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03년 부시 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를 발표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280-291). 동북아 차원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관행을 제도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탈냉전 시기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미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는 것이다. 능력에 주목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동맹국의 역할을 증대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지역적 문제에 동시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도 탈냉전과 9·11로 대변되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2004년 5월 주한미군 3,500명을 이라크에 전개하기로 하였고 2005년 말까지 1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 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는데 합의하고 관련

전력을 강화하고 보강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9,500명 정도 감축되어 28,500명이 주둔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존재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무정부 문화의 변화에 적합하게 적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존속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체성이나 그에 따른 행위의 논지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에 의하면 관행의 일상화는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화가 새로운 구조로서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3. 중대한 시기 III: 한반도의 평화체제

세계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탈냉전 도래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기반을 부정할 수 있는 파열적 사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를 언급하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부정하는 견해가 형성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이 언급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주한미군을 관련짓기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냉전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주한미군의 존립 기반이 상실됨을 의미할 수 있었다.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냉전체제에 국한하여 규정하는 것에서 연유한다. 왈츠가 NATO에 대해 전망한 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NATO의 실질적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여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같은 오류이다.¹²⁾ 현상적으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나 현실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을 내린 것이다. 만일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은 냉전적 속성에 천착되어

12) 왈츠(Kenneth N. Waltz)는 유럽에서 NATO의 존속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Flockhart 2016, 80).

있거나 아니면 변화의 와중에서 새로운 관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상화 단계에 다다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화되지 않은 것으로 냉전체제의 특질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도전 속에서 생존한 것이다. 탈냉전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에 적합화되고 잘 적응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한미군이 장기간 존재한 것은 분명한 사회적 사실이다. 1·21사태, 아웅산 테러, 연평도 포격 등 중대한 북한의 도발에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남한을 제어한 것은 그러한 변화한 관행이 일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이나 중국의 주장처럼 동북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었다면 상대적으로 70여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설명할 수 없다.¹³⁾

주한미군의 변화는 그 역할과 정체성으로부터 추론되어진다. 한미동맹 즉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현상 유지 즉 평화에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도 인정한다(박봉현 2004, 60-67). 그러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평화체제 형성에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들은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행들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야만 평화는 유지되고 보장될 수 있다. 평화협정 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음은 베트남 공산화 사례 등 비일비재하다. 한반도의 경우도 평화협정을 지탱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한 바 주한미군의 존재가 갖는 공유된 이해와 인식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북한 역지를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동북아의 현상 유지를 통한 평화 유지로 이를 관련 주요 행위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주조하는 무정부 문화와 유기적으로 잘 조화되어야 한다.

13) 표면적인 주장과 달리 주변 국가들 심지어 북한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현상 유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VI. 결론: 주한미군과 동북아 평화

주한미군은 동북아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사실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기능, 역할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어느 정도 합의를 공유되어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지금까지의 궤적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도 남한을 자제시키고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현상유지를 위해 기능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상화되었다.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공산진영의 침략 등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한다는 처음의 규칙이 유지되었지만 반복된 관행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 등 현상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제도화되면서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맥락적 이해를 통해 동북아라는 구조에서 주한미군이라는 행위자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의 적응을 통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 같은 분쟁이 없었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도 인정하고 있다. 동북아 구성원의 이러한 공유된 이해는 미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이 가능하다 해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적인 성격인 만큼 평화체제도 반도 수준이 아닌 동북아 차원에서 조망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북아 정세는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북한 핵과 중국의 부상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한미군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¹⁴⁾ 주한미

14) 미군이 핵 확산의 악순환을 막을 완벽한 조정자는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조정자가 될 수 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 문제가 자칫 무력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지력을

군의 냉전적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균형과 안정자로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면 그에 적합한 규범을 발전시키고 그러한 규범에 입각한 '적합성의 논리'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위를 조정하고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韓美 軍事 關係史 1871-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한미동맹 60년사』.
- 김성한. 1999. “한미동맹체제와 주한미군: 역할 변화의 모색.” 『전략연구』 제41집 2호, 167-196.
- 김열수. 2003.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재조명.” 『아태연구』 제10권 제1호, 1-41.
- 김일영. 2004.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과 주한미군의 미래.” 『군사논단』 39권, 32-56.
- 김재관. 2004.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119-144.
- 김창수. 2001. “주적개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황해문화』 31호, 120-136.
- 김태효. 2004. “미국의 한반도정책 변화와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연구』 통권 32호, 78-124.
- 김홍길. 2002. “탈냉전기 한미군사동맹 재편의 주요쟁점: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주한미군지위협정.” 『한국동북아논총』 제24집, 161-182.
- 남시욱. 2020. 『한미동맹의 탄생비화』. 하남: 도서출판청미디어.
- 동덕모. 1978. “1980년의 한,미,일관계전망과 그 대책 : 주한미군철수에 따른 한국의 안보와 평화통일문제.” 『국제문제연구』 5권 1호, 63-84.
- 리영희. 2000. “남북 관계와 주한 미군 문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상황의 질적 변화에 요구되는 발상의 대전환.” 『당대비평』 통권 제12호, 12-23.
- 마상윤. 2007. “미완의 계획: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2호, 1-36.
- 박봉현. 2004.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파주: 한울아카데미.
- 박원곤. 2007. “카터 행정부의 도덕주의 외교와 한국정책: 1979년 카터 대통령 방한의 재해석.” 『미국학』 제30권, 23-52.
- 박준규. 1978. “1980년의 한·미·일 관계전망과 그 대책 : 주한미군철수가

- 한반도정세에 미칠 영향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고찰.” 『국제문제연구』 5권 1호, 5-16.
- 박창권. 2006.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안보.” 『전략논단』 4권, 163-180.
- 백봉종. 1999. “통일이후의 주한미군과 중국.” 『21세기 정치학회보』 9권 1호, 201-217.
- 서유상. 2008. “세 가지 평화협정안과 세 가지 쟁점-주한미군과 유엔사 등 ‘근본문제’가 최대 쟁점.” 『민족21』 통권 제86호, 162-167.
- 신옥희. 2012.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3집 2호, 35-61.
- 안영락·전성현. 1999. “한미 적정 방위 분담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231-254.
- 오혜란. 201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장래: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한가?” 『내일을 여는 역사』 통권 77호, 96-105.
- 윤영미. 2007. “한미동맹과 신안보: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31권 1/2호(통권 101호), 127-151.
- 이상현. 2006.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 쟁점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46권 4호, 155-178.
- 이상현·조윤희. 2004.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80년대 말 철군 논의와 한반도 안보의 연계성에 관한 고찰.”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26집 1호, 167-186.
- 이성만. 2005. “미국의 안보정책결정과정과 주한미군 재조정.” 『한국동북아논총』 제35집, 155-174.
- 이수형·남창희.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집 2호, 121-138.
- 이상희. 1998.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재검토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적절성.” 『서울국제법연구』 5권 2호, 1-19.
- 이정윤.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전략논단』 1권, 119-130.
- 이철기.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개편방안.” 『통일정책연구』 13권 2호, 89-115.

- 정경영. 2018.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미래.” 『EAI이슈브리핑』 (7), 1-6.
- 정경영. 2020.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파주: 한올아카데미.
- 정성철. 2005. “관료정치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 『세계정치』 26집 2호, 185-204.
- 정세진. 2001. “주한미군 감축 및 위상변경에 관한 주요논의 분석: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7-44.
- 정육식. 2003.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인물과 사상』 64호, 45-55.
- 정효식. 2020. “꺼지지 않는 불씨, 불탄 회고록.” 『관훈저널』 156호, 243-250.
- 조관행. 2015.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카터 대통령 취임부터 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1권 제4호, 105-138.
- 조관행. 2018. “카터 행정부는 왜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정하였는가?: 77년 7월 10차 SCM 이후 78년 4월 21일 미의회의 승인까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제4호, 71-101.
- 조성렬. 2000.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4집, 211-232.
- 조상훈. 2009.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이각범 외.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조성훈. 2008.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조원선. 2020. “주한미군 철수압박에 대한 한국의 대응연구: 포드 행정부 시기 한국의 대미의회로비 전략.” 『동북아연구』 35권 1호, 139-174.
- 조진구. 2004. “1960년대 초반의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군과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미국 정부 내 논의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47권 1호, 61-86.
- 허욱-테런스 로릭 저. 이대희 역. 2019. 『한미동맹의 진화』. 서울: 에코리브르.

홍현익. 2003.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주한미군의 위상.” 『아태연구』 제 10권 제1호, 69-115.

황병무. 2020. 『한국 외군의 외교·군사사』. 서울: 박영사.

Adler, Emanuel. 2008. “The Spread of Security Communities: Communities of Practice, Self-Restraint and NATO’s Post-Cold War Trans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4, 195-230.

Carlsnaes, Walter. 2016. “Actors, Structures, and Foreign Policy Analysis.” In Smith, Steve, Amelia Hadfield and Tim Dunne eds.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Ca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eckel, Jeffrey. T. 1998. “The Constructivist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orld Politics* 50, 324-348.

Flockhart, Trine. 2016. “Constructivism and Foreign Policy.” In Smith, Steve, Amelia Hadfield and Tim Dunne eds.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Ca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Hopf, Ted. 1998.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3(1), 171-200.

Morgenthau, Hans J. 1948.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Inc.

Onuf, Nicholas Greenwood. 1989. *World of Our Making: Rules and Rule in Soci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Pouliot, Vincent. 2004. “The Essence of Constructivism.”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7, 319-336.

Walt, Stephen M. 1998. “International Relations: One World, Many Theories.” *Foreign Policy* 110, 29-46.

Waltz, Kenneth N.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54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4호 (2021)

-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8(2), 44-79.
- Wendt, Alexander. 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395-421.
- Wohlforth, William C. 2016. “Realism and Foreign Policy.” In Smith, Steve, Amelia Hadfield and Tim Dunne eds. *Foreign Policy: Theories, Actors, Ca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투고일 : 2021년 6월 30일 . 심사일 : 2021년 7월 1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7월 18일

* 박봉규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청주대학교 군사학과에 재직 중이다. 『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사실로 본 한국 근현대사』(공저), 『국제관계학』(공저), “한미동맹과 NATO”,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UN”, “시민사회 제도화기제로서의 이익대표체계와 민주적 공고화” 등을 저술하였다.

<Abstract>

US Forces Korea and Northeast Asian Situation

Park, Bonggyu
(Cheongju University)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U.S. Forces Korea(USFK). Although the USFK was established and survived due to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s now likely to maintain stability and peace due to the USFK. That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USFK continues through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despite repeated withdrawal decisions, reversal, and reduction.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USFK, the product of the Cold War, survives in the midst of the post-Cold War suggests that the USFK is adapting to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or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USFK has been establishing and institutionalizing its identity to suit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in critical junctions. It is clear that the change in the identity of the USFK and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a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of the USFK and affect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y say that if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USFK are properly established and functioned in Northeast Asia, which is unstable ami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t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Keywords : USFK, Northeast Asian Situation, Constructivism, Identity, Institutionalization